

새해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25 어젠다

일상이 지켜지는 사회로

국민에 총부리 겨눈 12·3 내란 사태 각종 사고에 광주·전남 지역민 큰 피해 국가 시스템·국민 안전 의식 높아야

국민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사회의 안전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초대형 참사가 일상화하고 있으나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민은 또다시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되레 위협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의대정원 확대로 장기 의료공백을 초래한데 이어 12·3계엄사태는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대형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반면교사의 교훈을 되새기지만 그때뿐이다.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 수준과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사회 곳곳에 퍼진 안전 불감증, 생명보다 금전을 앞세우는 산업 현장의 관행, 탁상공론과 정적을 쏟아내는 관료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근 수년간 국민은 기분을 무시한 우리 사회 관행 때문에 슬한 희생을 지냈다.

가깝게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지하철 이태원역 인근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159명(외국인 14개국 26명 포함)이 숨지고, 195명이 다쳤으며, 희생자 중에는 광주·전남 시민들 또한 10명 포함돼 있었다.

이 사고는 폭 4m 가량의 좁고 경사진 골목에 수백명 인파가 몰렸는데도 경찰 병력이 배치되지 않는 등 경찰과 행정당국이 인파 관리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참사로 분석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그동안 참사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인파 밀집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초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뺄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지자체 등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이 나아지고 있느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조차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022년 1월 11일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도중 201동 건물 23~38층이 붕괴하는 사고가나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같은 시공사가 추진 중인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라 지역민들의 충격이 컸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 무너진 건물 잔해는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는 안전을 무시한 현장 작업자들의 인재(人災)라는 결론이 났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정부는 사고 원인으로 무단 공법 변경,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을 꼽았으며, 학동 참사는 불법하도급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사, 부실한 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와 형식적 감독 등으로 빚어진 사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27일에는 광주시 서구의 한 클럽 내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죽고 3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반복되는 참사는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사고 또한 상기시키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인근 맹골수도 해상에서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해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사고다.

세월호 사고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기본적인 사고 원인 규명은 여전히 미진하다.

광주·전남 시민들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잇따르는 사고에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경기도 부천시의 호텔에서 발생한 불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7월 1일에는 서울시 중구 시청역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으며, 6월 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작업자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와 12·3계엄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일깨웠다.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국민들은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의료 공백이 1년 동안 이어지면서 응급실 뱅뱅이가 일상화했고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현재까지도 의정갈등의 이어져 의료사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사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언제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줬다. 국가가 군대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 자유와 일상을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상 조항이 여전히 유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기고 -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위험사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류는 재난과 함께 살아왔다. 지진이나 화재, 감염병 같은 전통적인 재난은 인류에게 오랜 시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를 점차 극복해 나갔다. 견고한 건축기술로 지진 피해를 줄이고, 소방제도의 발전을 통해 화재가 발생해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백신과 의약품 개발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통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과 경제가 발전한 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위험 역시 세분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그리고 2024년 제주항공 추락 사고 같은 대형 사고는 여전히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이 완벽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많은 목숨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안전 불감증과 시스템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술 발전'을 넘어서는 '안전 문화'의 정착이 절실하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 뒷받침되더라도, 경각심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다면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구조물의 점검이나 항공기 유지·보수 절차 같은 제도적·기술적 장치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 등 거대한 조직만의 책임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재난 현장에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껍데기를 찢는 '쪼'와, 밖에서 어미닭이 껍데기를 찢는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병아리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개인·시민 차원의 참여가 맞물려야 진정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늘날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은, 과거에 비극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모두가 잠시 분노하고 슬픔에 빠졌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또 다른 위험을 부르는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점검과 학습이 필수적이다.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구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닥쳐도 충분히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기성세대는 후배 세대에게 모범을 보이고,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변화와 실천을 주도해야 한다. 재난 안전은 정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진정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안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당시의 아찔한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2025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도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을 위해 전라남도가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총 2,000억원(창업자금 350억 원, 경영안정자금 1,650억 원)
- 지원 방법**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3~3.5%
- 지원 일정** 분기별 접수(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및 문의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순천, 목포, 여수, 광양, 나주, 해남지점) 대표전화 061-729-0600